

해양수산분야 국가예산 확보 박차

김중훈 전북자치도 경제부지사, 해수부 방문해 내년도 국가예산 반영·지역현안 해결 요청

전북특별자치도가 해양수산분야 국가예산 확보와 지역 현안 해결에 나섰다.

4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전날(지난 3일) 김중훈 전북자치도 경제부지사는 해양수산부를 방문해 내년도 해양수산분야 국가예산 및 주요 현안의 필요성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예산 반영을 요청하는 등 국가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였다.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과 면담을 가진 김 부지사는 △개야도 국가어항 개발 △노후 격포 여객선터미널 대체 건립 공사 △남부북항터미널 조성 △스마트 수산가공 종합단지 조성 △김양식장 신규개발 승인 등 지역 현안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군산 옥도면에 위치한 개야도는 어업인과 방문객의 이용이 많은 국가어항에 해당함에 따라 시설이 노후한 실정으로 어항을 전면 개발해 재해로부터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필요가 요구되고 있다.

부안 변산면에 위치한 격포 여객선



김중훈 전북자치도 경제부지사가 해양수산부를 방문해 내년도 해양수산분야 국가예산 및 주요 현안의 필요성 등을 설명하고 예산 반영을 요청하고 있다.

터미널은 지은 지 20년이 넘는 터미널로 시설 노후에 따른 이용객들의 불편이 심각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여객선터미널을 신축하고 대합

실, 매표소 등 여객선 터미널의 기능뿐만 아니라 문화 전시공간도 확충해 국내 3대 미항(美港)인 격포항에 찾아오는 이용객이 많아질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어 어가인구 감소 및 고령화 등으로 활력을 잃어가는 어촌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낚시객들을 유입하기 위한 낚시복합타운 조성사업과, 스마트 기술을 수산식품 산업과 접목해 수산식품 산업의 부가가치 향상 기반 마련할 수 있는 스마트 수산가공 종합단지 조성사업 등이 내년도 해양수산분야 주요사업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

아울러, 주요 현안으로 우리나라 대표 블루푸드인 '김'의 가격 안정 및 수출 확대를 위한 김 양식장 신규 개발 승인 등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협조도 요청했다.

김중훈 경제부지사는 "해양수산분야의 주요 현안사업이 내년도 국가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며, "지속적으로 다양한 지역 현안 예산들이 반영되어 수산업 발전과 어업인들의 소득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4일 아프리카 남쪽에 위치한 '레스토 왕국'의 농업식량안보영양부 장관이 전북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우수성을 배우기 위해 방문했다.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 세계서도 인정

아프리카 레스토왕국 농업식량안보영양부 장관 방문 전북 스마트팜 청년창업보육 등농업교육프로그램 견학

전북특별자치도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스마트팜 혁신밸리로 떠오르고 있다.

4일 아프리카 남쪽에 위치한 레스토 왕국의 농업식량안보영양부 장관이 전북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이하, 혁신밸리)의 우수성을 배우기 위해 방문했다고 밝혔다.

타보 모포시(Thabo Mofosi) 레스토 왕국 장관은 전북자치도의 스마트팜 시혁신밸리의 시설 현황을 시찰하고 우수한 청년창업 보육 시스템에 대해 다양한 질문을 통해 많은 관심을 표했다.

또한 농식품인력개발원에서 시행하는 작물재배기술, 농기계교육, 청년농업인 및 귀농귀촌 교육, 농식품 및 가공 창업, 마케팅, 농업정책 교육 등 다양한 농업인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높은 관심을

보이면서 자국의 농업발전을 위해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하였다.

이후 타보 모포시 장관은 전북특별자치도 이광호 국제관계대사와 면담을 갖고 레스토와 전북자치도의 다양한 정책에 대한 의견을 교류했다.

김제 혁신밸리는 2021년 11월 준공 이후 한국형 스마트팜 시설과 연계 산업을 견학하기 위해 전국 및 세계 각국에서 방문하고 있다.

올 초에도 키르키즈 공화국 주한 대사, 호주 캔슬랜드 주정부 및 대학관계자, 일본 농업인 등 해외에서 혁신밸리 시설과 청년창업 보육 시스템을 견학했으며 경기· 강원 농업기술원, 인천시 교육청, 대학교, 공무원 등 전국 각지에서도 방문했다. /김재훈 기자

전북자치도, 여성·아동분야 권익증진사업 본격 추진

1차 공모에 7개 단체 선정해 4800만원 지원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내 여성과 아동의 권익 증진을 위해 본격적인 지원을 추진한다.

전북자치도는 여성·아동분야 민간사회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지역사회 공익활동 증진을 위해 공모를 통해 최대 10개 단체에 사업비 7,200만원을 투입한다.

지난 2월 1차 공모에 7개 단체가 최종 선정되어 전북YWCA협의회 등의 단체에 여성분야 4개 사업, 사다다리 동화연구회 등 단체에 아동분야 3개 사업으로 총 4,800만원이 지원될 예정

이다. 여성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에너지 그린 리더양성 사업', 상실 극복 프로젝트인 '마음 안이주기', 아동의 성평등 인식 조기교육과 아동 문화활동 지원 사업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전북자치도는 1차 공모사업에 신청하지 못한 단체를 위해 '여성·아동분야 민간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2차 공모를 실시할 계획이다.

여성·아동분야에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면서,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 있는 비영리 민간사회단체(법인)

는 9일 오후 5시까지 전북자치도청으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접수가 가능하다.

최근 3년 연속 동일 사업은 지원에서 제외되며, 총사업비의 10% 이상 자부담 필요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북자치도 홈페이지(공고/고시)를 참고하거나, 전북자치도 여성가족과(280-2524)로 문의하면 된다.

2차 공모는 총 사업비 2,400만원 규모로 2~3개 단체를 선정하며, 4월 중 서면검토와 현지확인 등 사전검토를 거쳐 5월 전북자치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

전북자치도는 추진단체와의 꾸준한

현장 소통을 거쳐 사업 진행의 적정성을 판단하고, 단체의 애로사항 청취 등을 통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사업 완료 후에는 정산과 성과평가를 통해 사업의 효과 및 개선사항 등을 도출해 내년 사업 추진에 반영할 계획이다.

김정 전북자치도 여성가족과장은 "여성, 아동분야 공익활동 단체의 자생력 향상과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매년 공모를 통해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 다양한 신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전북청년허브센터, 광역 자치단체별 거점 청년지원센터 지정

전북자치도가 광역 거점 청년지원센터를 통해 청년정책에 본격적으로 박차를 가하기 시작한다.

전북자치도는 전북청년허브센터가 '청년기본법'에 따라 국무조정실이 지정하는 '광역 자치단체별 거점 청년지원센터'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지정 기간은 2024년 4월 1일부터 2027년 3월 말까지 3년이다. '전북청년허브센

터(www.jb2030.or.kr)'는 (재)전북청년경제혁신센터 내에 2020년 5월 개소해 청년정책 홍보·안내 및 맞춤형 상담, 정책발굴 및 사업화, 도내 청년센터 간 협업 추진, 청년 유관기관 소통, 청년활동 지원, 중앙 공모사업 수행, 청년축제 등 다양한 청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국무조정실은 중앙과 기초를 잇는

정책 전달체계의 중추 역할을 담당할 광역 센터로 전국 14개 광역시도의 지역 거점 청년지원센터를 지난 1일 최종 지정했다.

이어 지난 2일 세종시청 대회의실에서 국무조정실 이영조 청년정책관과 강영재 전북청년허브센터장 등 전북자치도를 비롯해 14개 지역 청년센터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거점 청년지원센터 지정 기념 현판 수여식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도는 전북청년허브센터를 통해 지역 청년지원센터 업무수행 및 그밖에 중앙 청년지원센터 지침 등에 따른 공통 사업을 수행하며, 광역 청년지원센터로서의 역할을 강화시켜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노홍석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지역 거점 청년지원센터 지정을 통해 중앙과 기초를 잇는 정책 전달체계의 중추적 역할을 할 것이다"고 전했다. /김재훈 기자

도,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대비 사전투표소 현장 점검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및 재보궐선거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꼼꼼히 살폈다. 전북자치도는 5~6일 사전투표를 앞둔 4일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사전투표소를 현장 방문해 사전투표 준비 상황 등을 점검했다.

이날 투표사무원, 안내요원 등 사전투표관리 인력 확보 및 교육 여부, 장애인 등의 투표 편의시설 설치 여부, 투표용지 발급기와 같은 사전투표 운용 장비 작동 이상 여부와 투표소 주변 화재, 폭발물 등 위험물질 유무 등 안전관리 사항, 모의시험 진행 상황 등을 점검 점검했다.

이번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및 재보궐선거 사전투표는 도내 243개 투표소

에서 5~6일 이틀간 실시된다.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만 18세 이상의 유권자는 신분증만 가져가면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다.

선거사무 지원 인력은 도, 시·군, 국가공무원, 일반인 등 총 1만2,378명이 투·개표 사무에 투입돼 선거 사무를 빈틈없이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도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투표일 상황관리 및 각종 사건·사고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4개반 9명으로 구성된 투·개표지원상황실 운영을 통해 행정안전부, 선거관리위원회, 시군간 유기적인 연락체계를 구축해 투·개표 상황 근무에 민전을 기할 계획이다. /김재훈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